

## “바쁘다, 바빠”...한가하던 광주시·구청 여권창구 ‘복새통’

**광주 1월 여권발급 전년동기 대비 14배 늘어  
 코로나19 규제 완화이후 해외여행수요 폭증  
 겨울방학 설 겹친 1월엔 밤 10시까지 야근**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해외 여행 수요가 늘면서 광주 지역 시·구청 여권 발급 창구가 대기 인원으로 복새통을 이루고 있다. 구청의 경우 하루 여권 신청 건수가 70건까지 육박하면서 주민들은 긴 대기줄에 따른 불편을, 공무원들은 업무 마비를 호소하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시청·5개 자치구 여권 발급 신청 건수는 1만 4384건이다. 이는 지난해 1월 1010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4배나 늘어난 수치다. 앞서 광주 여권 발급 신청 건수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기점으로 3년 새

(2019년~2021년) 12배 가까이 줄었다. 그러다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하반기부터 여권 신청이 월 평균 1만 건 안팎을 기록, 코로나19 이전 발급 수준을 회복했다. 광주지역 여권 발급 신청건수는 ▲2019년 12만 3743건 ▲2020년 2만 1882건 ▲2021년 9687건 ▲2022년 6만 128건이다. 해외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제작·심사 절차가 지연, 여권 발급 기간도 평균 5일~7일에서 10일 이상으로 늘어났다. 각 구청과 시청 민원실 여권 창구도 마비

상태다. 현재 하루 평균 주민 50~70명이 창구에서 여권 발급 신청을 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대기 시간이 길어져지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창구 상담을 받은 한 주민은 공무원이 ‘여권 사진 규격이 맞지 않아 접수가 어렵다’고 안내하자, “오래 기다렸는데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며 불만을 하기도 했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여권 발급 기간 보통 며칠 인가요. 늦어져 애타네요’, ‘시청·구청 중 여권 발급 빨리 되는 곳이 어딘가요?’라는 문의글이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들도 격무를 호소하며 충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광주 서구 민원봉사과 A직원은 “3명에서 접수·심사·배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잠시 화장실을 다녀올 시간조차 부족하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 B직원은 “겨울방학과 설 명절이 겹친 지난 1월엔 오후 10시까지 야근을 했다. 요즘은 오후 8~9시까지 일을 하고 있다”며 “충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임형택기자

## 검찰, 광주 등 전국 4개 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설치

검찰이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전국 4개 권역을 담당하는 검찰청에 설치한다. 외국에서 마약을 들여오는 고리를 끊어 국내 마약 유통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에 나섰다라는 평가다. 대검찰청은 21일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

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검찰 69명, 관세청 6명, 식약처 3명, 서울시·인천시·부산시·광주시 각 1명,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2명 등 총 84명 4개팀이다. 서울중앙지검에는 25명, 인천지검에는 24명, 부산지검에는 20명, 광주지검에는 15명이

투입됐다. 각 지검의 강력부장(부장검사·광주지검은 반부패·강력부장)이 팀장을 맡는다. 지검별로 마약전담 검사도 2~3명이 투입된다. 검찰은 마약수사관도 54명 투입한다. 이 중 10명은 다크웹 수사팀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마약범죄 대응책을 발표했고, 서울중앙·인천·부

‘마약 밀수’·‘다크웹’ 전문 마약수사관 배치 “단순 투약 정보 경찰 인계...빈틈 없을 것”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도록 최선 다해”

산·광주지검에 마약밀수 및 다크웹 추적 수사 분야 전문 마약수사관 11명을 추가 배치했다.

올해 인사에서도 서울중앙·인천·부산에 다크웹 전담수사팀 관련 마약수사관 정원을 10명 늘렸다. 외국에서 마약이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는 과정을 통제하겠다는 취지다.

특별수사팀에는 ▲지역 세관의 공·항만 마약밀수 전문인력 ▲식약처와 지자체 보건·의약 전문인력 ▲KISA의 마약류 판매광고 사이트 차단 및 삭제 전문인력 등도 참여했다.

대검은 “광역단위의 합동수사 중 확인된 국내 지역별 유통, 단순 투약·소지사범 등에 대하여는 범죄정보를 경찰에 인계하고, 경찰 수사 사건은 마약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 및 송치 사건을 전담 처리해 ‘밀수-유통-투약’에 대해 광역·개별 지역을 아우르는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검찰이 외국에서 마약을 들여오는 조직과 이를 국내 유통하는 조직을 검거해 소지자까지 검거하는 하향식이라면, 검찰은 마약 소지·투약자를 검거해 조직까지 수사하는 상향식 수사 방법을 사용한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는 영역이 다소 다르다. 경찰과 더불어 스크린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개별 사건 수사에서는 국가정보원도 참여한다. 국정원은 특정 인원을 특별수사팀에 파견하지는 않았고, 개별 사건 수사에 참여해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마약 사범은 총 1만 8395명이다. 2021년(1만 6153명) 대비 13.9% 증가해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은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불과 5년 만에 2.4배 늘었다.

최근 마약거래가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보안메신저·암호화폐를 이용하고 ‘던지기’(특정 장소에 마약을 던져놓으면 구매자가 가져가는 식) 방식으로 이뤄지는 등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양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 해외 직구(직접 구매)도 급증하는 등 연령·계층을 불문하고 누구나 손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가격도 저렴하고 거부감이 적은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 등)의 확산세도 심각하다. 10~20대의 펜타닐 중독 문제도 있다.

검찰은 온라인 상 마약 홍보글도 차단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예산을 확보해 기존에 운영 중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AI를 통해 마약 판매 홍보글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검은 “철저한 수사뿐만 아니라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에도 힘써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승호기자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 등록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21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조합장 입후보자가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오는 3월8일 실시된다.

건강한 밥상의 시작

# 청정엘로우시티 장성 먹거리








